



인도

인도-미국 핵협력협정 체결

지난 3월 1~4일간 인도를 방문한 부시 미 대통령은 3월 2일 싱 인도 총리와 정상 회담을 갖고 인도의 민수용 핵시설에 대한 핵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인도가 2014년까지 통합형인 핵시설을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구분하고 총 22개 원자로 중 민수용 원자로 14개에 대해 국제사찰을 허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이 인도에 대한 핵 동결을 해제하고 핵연료와 기술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민수용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전제로 핵기술 제공

지난해 7월 미국을 방문한 싱 인도 총리는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¹⁾ 미가입국인 인도에 대해 예외적으로 민수용 핵기술과 연료를 공급한다

고 합의하고, 동 합의의 시행을 위해 민간핵시설을 구분해 민간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자 하는 미국으로서 원자력 에너지를 제공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IT산업 및 제조업의 호조로 연평균 7%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로서는 자국의 경제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인 에너지 부족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며 특히 심각한 전력 부족²⁾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설비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인도 전력생산의 약 80%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설비의 비중은 2.4%(2.7GW³⁾)에 불과하다. 인도는 과거 냉전시대에 러시아로부터 핵기술을 전수받았으

1)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으로 1969년 6월 12일 체결되었으며, 현재 회원국 수는 185개국임.

2) 인도 전력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4년 기준 인도의 1인당 전력 소비량(연간)은 세계 평균(2,326kw)의 1/4 수준인 592kw에 불과하며, 중국(1,093kw)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임.

며 1990년대까지 양국간 기술교환이 이루어졌다. 인도 정부는 2020년까지 핵발전 능력⁴⁾을 20GW까지 증설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핵발전의 확대를 위해서는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핵동결을 해제하고 핵 공급국 그룹(NSG)⁵⁾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절대적 지지가 요구되었다. 두 나라는 잠정 합의안 도출 이후 핵사찰 범위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인도가 마지막까지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고속증식로 2기를 사찰대상인 민간 핵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아 핵협력협정 타결이 불투명하였으나, 부시 대통령의 인도 방문 직전 미국이 인도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전격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인도와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협

력과는 별도로 투자와 통상 등 7개 부문에 대한 협력 확대와 함께 미국이 2008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발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대 인도 협력 강화 정책 추진

중국은 인도와 미국의 핵협력협정이 핵 확산금지조약(NPT)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히며 경계감을 표출하고 있으나, 최근 인도의 정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프랑스, 호주, 핀란드,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은 이번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 인도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계 1위의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는 부시 미 대통령의 인도 방

〈표〉 최근 주요국 총리 및 국가원수의 대 인도 방문 사례

국가	시기	주요 합의 내용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2006. 2. 20	- 통상과 국방분야의 상호협력 합의, 평화적 목적의 핵협력을 추구하는 '핵 선언' 발표
미국 (부시 대통령)	2006. 3. 1	- 핵협력협정 체결, 투자, 통상, 국방, 에너지, 우주여행, 농업, 보건 분야의 협력 강화 합의
호주 (존 하워드 총리)	2006. 3. 5	- 국방 협력과 통상, 항공, 소비세 및 관세, 생명공학, 전략적 연구 등 6개 분야에 대한 협력 협정 체결
핀란드 (바하넨 총리)	2006. 3. 11	- 물류처리 장비 관련 합작회사 설립,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와 통상, 투자, 국제안보 분야에서 상호 협력
러시아 (프라드코프 총리)	2006. 3. 16	- 통상, 국방, 항공,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논의

3) 1GW(gigawatt)=10억 W.

4) 인도 정부의 Nuclear Power Corporation of Indian Ltd(NPCIL)사가 인도의 6개 핵발전 시설에 대한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500MW 규모의 신규 핵발전소 2기가 Tarapur 지역에서 2006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음.

5) NSG(Nuclear Supplier Group)는 70년대 초 민수용 핵시설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핵 관련시설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해 1974년 탄생되었으며, 핵 관련장비, 기술, 재료의 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음. 현재 미국, 한국 등 총 45개국이 회원국임.

문 직후 하워드 총리가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와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인도를 방문하여 6개 분야에 대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인-미 핵협력협정에 대한 연구 그룹을 설치함으로써 향후 호주 우라늄의 대 인도 수출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의의와 전망

이번 핵협력협정의 체결은 두 나라가 본격적인 동맹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냉전체제 종식 후 상대방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인도의 핵실험, 대테러 전쟁 수행에 따른 파키스탄과 미국의 관계 강화 등으로 변화를 겪어 왔던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 핵협력이 확실한 수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으로서는 인도가 향후 다극화시대에 군사 강국인 중국에 대한 견제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거대 잠재시장인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를 모색하는데서 이번 협정 체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인도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데에 이

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이 지난해 4월 그동안의 반목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인도로서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미국으로 전투기 등 무기 구입선을 전환하고 있어 향후 양국간 관계 강화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핵협력협정이 이행하려면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 미가입국과의 핵거래를 금지하는 미 원자력법 개정안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45개국으로 구성된 핵 공급그룹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와 중국 등 국제사회의 일부는 인도와의 예외적 핵협력이 이란이나 북한 등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비판하고 있어 향후 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 승 호】